

## 남북, 기업간 무역결제용 통화 제작

남북한 기업간 거래시 이를 결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화가 만들어진다.

2차 남북실무접촉을 벌이고 있는 남북한은 10일 4개 남북경협 합의서 가운데 청산결제 합의서에 결제수단으로 달러화 외에 다른 통화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키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다른 통화란 남북간 거래를 청산 결제하는 수단으로 남북무역에만 적용되는 특별 지불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유로와 비슷한 통화가 여기에 해당되며 청산결제로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예가

있다"고 말했다.

식량투명분재와 관련, 북측은 남측요구를 일부 수용해 분해체계 및 각 지역별 분배현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고 남측 대표단은 김영삼 대통령시절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을 제공한 이후 처음으로 식량분배 현장인 평양 개선동 지역을 직접 현장 방문했다.

한편 남북한은 전날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립하고 판정부 인원수는 3명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 해외 원전시장개척 지원 강화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기업간 M&A 등 원자력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원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원전시장진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세일즈 외교를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또 산업협력위원회 등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선후발 원전국과의 원자력산업협력을 강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한전 등 국내기업과 미 웨스팅하우스사 간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한국표준형원전의 해외 건설과 원전기자재 기술용역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1억달러, '99년 2000만달러 등 '91년이후 10년동안 총 2억달러 상당의 원전관련 제품이 수출됐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한전 직원의 해외 무역관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 웨스팅하우스 등 세계유수 원전건

설사들은 적대적 M&A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규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수주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자부, 전력선통신 내년 상반기중 상용화

산업자원부는 전력공급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력선을 음성, 데이터, 인터넷 등을 고속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으로 활용하는 고속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기술적으로는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총 200억원(1단계 2001년 9월까지 72억원)을 투입해 10Mbps 이상의 전력선 통신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소(총괄), 기인텔레콤(주), 한전 전력연구원, 서울대 자동차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전(파워컴), 두루넷, LG전자, 기인시스템, 심플렉스인터넷, 리트로닉스 등도 산학연 공동 연구에 참여중이다.

산업자원부는 고속데이터 통신 이외에도 전화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가를 주대상으로

해 전력선을 이용한 음성전화 기술을 개발중이며 2차연도에 다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시스템의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의 원격검침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르면 내년초 세계 최초로 전력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제주지역에서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전력선 통신기술의 국내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 사업과 관련해 이미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인 ENEL사(700만 세대), 일본의 시코쿠전력(1천세대) 및 규수전력(300세대)는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고 저속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 기술들은 아직까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산자부, 독자 전력산업 기술기준 제정 발간

산업자원부는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소 등 모든 전력설비의 설계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제정 발간했다.

이번에 제정된 전력산업 기술기준은 정부 지원 하에 산·학·연 공동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모든 전력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기술중속을 탈피하고 관련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전력산업 기술기준은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156억원을 투입해 개발되었으며 총 59권 2만여쪽의 방대한 양으로 모든 전력설비의 설계 제작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적 기준 및 자료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독자 기술기준이 없어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시 미국 등 외국 기술기준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술자립은 물론 주요 기자재 국산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력산업 기술기준이 제정 발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력산업 기술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이번에 제정된 전력산업 기술기준에 세계적인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를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제정된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관련 정부고시에 반영해 모든 전력산업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자부, 2000년도 3차 VA협약 체결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유화공업, 삼성전기 등 27개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체 대표들과 2000년도 제3차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98년 VA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71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은 산업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3천900만 TOE에 이르게 됐다.

이날 VA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오는 2004년까지 고효율기기설치 및 공정개선, 폐열회수설비 및 폐기물 재활용,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들 업체들이 협약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총에너지사용량('99년 기준)의 9.8%인 21만7천 TOE의 에너지를 줄이고 약 517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산자부는 협약기업에 대해 이자율 5.5%의 에너지 절약시설자금(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자문과 기업이미지 홍보 등을 통해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산자부는 이달 중 한국전력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기업 40여개 사업장과 추가로 VA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업에 대한 내년도 자금지원규모를 올해보다 95.3% 늘어난 586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자부는 VA협약 체결식에 이어 에너지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자를 초청, 기후변화협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연도	'98	'99	2000 (실적)	2001	2002	2003	계
사업 장수	15	52	133 (104)	130	135	135	600

약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선 오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협상전략 등이 토의됐다.

## 산자부,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조사 착수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신뢰성을 공동으로 인정하고 국제시장 진입을 쉽게하기 위해 기술도 표준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들어가 시험·분석·평가와 같은 연구개발, 산업현장의 검증 등 표준화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착수한 표준화기술개발 수요조사는 △측정기술 △시험평가방법 △표준물질 △국

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기술분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2001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표준화기술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체계적인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 표준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협정 출범

ILAC(세계시험소인정기구)는 워싱턴 DC Marriott 호텔에서 ILAC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식을 개최, 한국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을 포함한 세계 27개국 37개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대표들이 모여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 제품, 한번의 시험·검사, 어디서나 수용'을 지향하는 세계무역 자유화에 진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상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이 전세계적으로 상호통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수입국가로

부터 일일이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에 대한 시간, 비용부담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ILAC 상호인정협정은 '협정에 참여한 각 인정기구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자신들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는 곧 한번만 제품시험을 하면 그 시험성적서가 협정 참여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체결 및 WTO 설립

이후 무역상의 관세 장벽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장벽은 아직도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남아 있다.

## 산자부, 산업기반기금 용자금리 0.5% 인하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기금의 용자금리를 0.5% 인하(현행 7.5% → 변경 7.0%)키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를 주로 담당하는 산업기반기금 용자금리를 0.5% 인하함으로써 기업 설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연 6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산코스트를 절감시켜 시장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출원리금 조기회수 등으로 조성된 1,139 억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산업기반기금 용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번 공고에 따라 해당 분야별 취급기관에 접수(11월중) 하면 용자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기금을 대출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재래시장내 공동창고 건립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래시장내 공동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02-316-3452)에 신청해 최고 30억원 까지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추가 지원 부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 경	증가액	비 고
산업구조고도화	264,357	296,400	32,043	- 고부가가치화 부문 · 섬유(30억원), 금형(60억원) 등 - 신기술보급 · 자본재(60억원) 등 - 지역산업균형발전 · 대구·경북섬유(150억원) 등
지식기반산업 발전	67,000	67,300	300	- 지식기반서비스업 · 컨설팅(57억원) ※ 항공우주 등 반납액(54억 포함)
유통합리화	70,400	93,960	23,560	- 물류부문 · 재래시장 내 공동창고 건립(180억원) 등
산업단지활성화	94,000	142,000	48,000	- 산업단지합리화 · 입주업체시설비(539억원) ※ 무등록공장 반납액(59억 포함)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66,000	76,000	10,000	- 환경설비투자 · 환경생산설비(10억원)
총 계	561,757	675,660	113,903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0.5% 인하

자본시장 침체와 금융경색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크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조개선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 상반기까지는 다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자금을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월별 수요 추이를 보면 이같은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구조개선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118업체 377억원, 142업체 872억원, 128업체 699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10월에는 200업체에 999억원으로 적게는 130억원 이상 많게는 620억원으로 3배까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판로개척, 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운전)자금도 7월부

터 9월까지의 각각 199업체 440억원, 145업체 424억원, 177업체 487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10월에는 246업체에 676억원으로 적게는 190억원 이상 많게는 250억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수출신용장을 확보하고도 수출원부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출금융지원자금도 9월까지의 95억원으로 신청이 미미하던 것이 10월 들어 12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정책자금 폭증세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경색 현상에도 영향이 있지만, 지난 10월부터 정책자금 금리를 종전 연 8.0%에서 연 7.5%(수출금융은 연 7.4%에서 연 6.8%)로 0.5% 인하했고, 구조개선자금도 공장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자금지원조건의 완화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금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신청서를 1매로 축소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 중소기업관 자체운영 계획 추진

그 동안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해온 인터넷 중소기업관이 내후년부터는 자체 수익

모델을 통한 자체운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현재 1만6천여개의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상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운영하고 있는 중진공 인터넷 중소기업관이 내년 이후부터 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자체 수익모델을 찾기에 나섰다.

중진공의 인터넷 중소기업관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중진공은 그동안 무료로 중소기업에게 업체별로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를 국·영문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또 e-메일 서비스와 함께 수출과 관련된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인지도와 공공성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업체의 참여율은 매우 높다.

현재 중진공은 본 인터넷 중소기업관과 관련해 홈페이지 제작금액 5억8천만원과 기타 운영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10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중진공은 이 자금을 통해 공공근로 사업이나 외주를 통해 무료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진공은 내년까지의 예산은 확보한 상태나 내년 이후에는 예산이 중단, 또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진공 측은 일단 정부 지원이 감소될 경우 본 사이트 자체를 민간에 인양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중진공 자체 인력 4명으로는 도저히 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를 BtoB업체, 솔루션업체, 물류, 보험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온 수익으로 본 인터넷 중기관을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모델 찾기는 중진공이 그동안 공기관으로서 운영해온 본 사업이 공공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진공이 수익모델 찾기에 급급하다보면 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지도 모른다는 것.

또 인터넷에 중소기업관의 인지도가 높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수익창출이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기존 사이트와 함께 최근 상공회의소, 전경련, 기협중앙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 정부지원을 줄이고 자체 수익모델을 찾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 ISO 정보통신분과 의장국에 선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기술위원회(JTC1)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분과위원회(SC6) 의장국 및 간사국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분과위원회는 인터넷통신, 통신프로토콜, 데이터전송등 정보통신기간 정보교환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표준을 다루고 있어 이번 의장국 및 간사국 선임으로 우리 정보통신기술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자국 보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엄청난 로열티 수입과 안정된 시장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의 TC47/SC47E(개별반도체소자) 분과위원회 간사국만을 수입해 왔으나 이번에 정보통신기술분과위원회(JTC1/SC6)의 의장국 및 간사국을 추가 수입함으로써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개기를 올리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금 711억 확정

내년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 예산이 총 711억 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올해 135억6,000만원보다 424.8%나 늘어나게 된다.

중기청이 밝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89% 증가한 157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무역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융자받게 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50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이용 기회를 보다 확대시켜준다는 의도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규격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로써 세계 12만8,000종의 규격중 규격확보에 애로를 겪는 품목 및 수출이 많은 국가의 규격 등을 확보해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 연

구소, 대기업, 시험기관 등 규격 보유기관간에 상호 규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51억원이 신규로 책정된다.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키 위해 관련 자금을 올해 83억6,000만원에서 27.9% 늘어난 106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유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미개척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해 자사제품 세일즈활동을 벌일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7억9,000만원이다.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전자상품 카탈로그의 영문 구축을 지원해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의 홍보 및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만4,000업체의 영문홈페이지 및 6만개 전자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한다. 이 분야 예산은 5억8,000만원이다.



## 특허청, 중국내 한국상표보호 강력 요구

특허청장은 북경에서 중국 상표국 호린(HOU Lin)국장과 한·중 고위상표당국자 회의를 갖고 최근 한·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장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이를 국제규범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한·중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우리기업 지재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한국 지재권 침해가 주로 상표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청의 조치는 양국간 지재권 침해 부분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2002년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을 앞둔 한국은 이미 지난 '95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중국의 의정서 가입 및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심사관 교류 및 정보자료의 교환 등 양청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을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표국은 한국 특허청의 전산화시스템인 KIPONET에 관심을 표하고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전산화 경험의 전수를 위해 전산전문가 교류를 희망,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했다.

## 정부, '해외규격 도서관' 설립 추진

정부는 해외인증 및 품질규격 획득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규격도서관을 설치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인증제도를 무역규제 장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해외규격도서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대전 설치가 유력시되는 해외규격도서관은 미국의 UL마크 EU의 CE마크제도 일본의 T마크제도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인증관련 책자 및 규격정보를 비치함과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내년도 해외인증지원예산 가운데 51억원을 이 사업에 배정하고 오는 2001년 본격가동을 목표로 현재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해외인증을 개별 기업별로 획득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경제적 낭비가 초래돼 왔다"며 "무역인프라 조성작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해외규격도서관은 국내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방지, 국가적 손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인증관련 정보제공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해외규격 정보부족으로 인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데다 심지어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조차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페인트와 건축자재를 미국, 싱가포르, 호주 및 일본으로 수출하는 K화학은 각 나라별로 실시

되는 중복시험으로 인해 연간 3억여원의 시험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이 기업은 평균 25~45일가량 소요되는 인증획득 시험타에 납기 지연 및 금융상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인증획득 특정규격에 지원 편중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CE, UL 등 특정규격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총 2,520개 인증마크중 CE(유럽) 인증마크가 1,017개, UL(미국) 마크가 555개로 이들 2개 규격인증마크가 전체 인증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기청에서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

크가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 민간시험연구원 및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지원하고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최고 70%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업체는 '98년 379개업체, '99년에는 821개 업체, 올해 9월말까지 1,320개 업체에 달했다.

## 중소기업에 통상법률 서비스 지원 예정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2001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에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규제국이 과거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인도·남아공화국·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조하여 수입규제 움직임에 사전에 포착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사 단계별로 정보와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질문서 작성 등 대응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 통상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외국 정부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소송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신규예산을 신청했다"며 "업체들의 분쟁사례를 파악

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KS규격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한국산업규격(KS)이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정부부처의 기술기준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국산업규격의 실태를 조사해 오는 2004년부터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산업계는 국제수준에 맞는 신기술과 조립라인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산업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더 이상 현행 KS규격으로는 대외수출을 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부응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가 국내 모든 산업의 제품규격을 정한 KS는 일본의 제품규격인 JIS를 그대로 모방한 과거의 규격체계인데다 그 기준이 이미 20년 전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제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KOTRA, 고객센터 설치, 본격가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소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설치,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최근 10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입수한 종합적인 현장 마케팅정보를 중심으로 각 지역팀, 마케팅팀, 고객센터팀이 업계의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시장진출방안을 중소기업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고객센터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한 문의상담은 물론,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하여 고객문의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현지 근무경력 직원을 중심으로 현지 상거

래 관행 등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 정보를 상담기로 하였다.

다만, 심층시장조사나 현지 세일즈방문 등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정보조사는 일정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KOTRA는 사옥이전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양재 전철역에서 염곡동 사옥까지 셔틀버스를 매일 4회 운행하고 있다.

- 상담전화
  - 대표전화(3460-7114) : 지역 시장진출 및 현지경험 상담
  - 고객센터 : 일반무역 상담(3460-7391)
  - 국제무역사기, 애로사항 상담(3460-7373)

• FAX문의 : 3460-7932/34

보자료 상담

• 무역자료실운영팀(3460-7408) : 각종 무역정

## 한국무역협회, '코티스' 인터넷서비스로 재탄생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종합무역정보서비스 코티스(KOTIS)가 인터넷서비스로 재탄생한다.

현재 PC통신 방식으로 제공되던 코티스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서비스로 전면 개편돼 편리한 사용자 환경과 다양한 무역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인터넷 코티스(www.kotis.net)는 무역의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로드맵 방식을 따르게 된다. 무역로드맵은 기존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무역의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코티스는 풍성한 정보를 사용자들에 맞게 정리해 주는 '마이코티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접속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수출 주력 품목이나 국가 등 원하는 요소와 분야를 선택할 경우 자신만의 코티스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관심분야의 소식과 정보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의 공고 등을 e-메일로 매일 받아볼 수 있는 '코티스 e-메일클럽'도 제공된다.

인터넷코티스는 무역인들의 사이버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

정이다. 무역인들이 자유롭게 동호회를 결성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역인 커뮤니티'는 국내 최강의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맡아 구축중이다.

이 코너에서는 무역협회의 전직원이 참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식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국내 최대의 상품목록을 보유하게 될 상품 시소러스, 무역단계별 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도 신규서비스로 탄생한다.

인터넷코티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코티스는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서비스와 풍부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통합무역정보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코티스 이용자들은 별도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익스플로러 등의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코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역인 커뮤니티와 웹메일, e-메일 클럽 등은 무료회원 등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WTO 보조금' 선진·개도국간 갈등 심화

최근들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은 타회원국의 WTO 보조금 지원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는 등 자국내

산업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철강산업관

련 산업피해 정도를 조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무부에서는 대미 철강 수출이 급증하는 중국과 인도, 대만, 우크라이나에 협상단을 파견,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EU의 경우 유럽 조선협회연맹(CESA)이 2000. 10. 24일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불공정 가격 경쟁 혐의를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 및 EU의 보조금관련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스 제네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실무자회의'(Working Party)가 개최되어 보조금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이 예전과 달리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보조금 통보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핫이슈가 되었다. 보조금통보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타회원국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에 저해가 되는 보조금지원을 파악,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케하는데 있다.

WTO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통보와 관련해 회원국의 의무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신규완전통보가 '95년 출범당시 통보율이 58% 정도이었으나, '98년 2차 신규완전통보시에는 35%로 줄어들었으며, 보완통보의 경우 '96년도 통보율은 41%, '97년도는 33%, '99년에는 25%, 금년은 16% 정도로서 WTO출범당시와 비교했을 때, 통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은 WTO협정 발효이후 보조금 관련 통보의무에 있어 그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착안, 동 협정상 통보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조금 통보의무와 관련 미국측의 주장은 '상기 의무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의거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세계공정무역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가들은 보조금 통보제도가 미국 및 EU 등 선진국에게 타회원국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오히려 선진국의 보조금관련 상계조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제도가 회원국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별다른 효용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동 제도상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Byrd법에 대해서도 WTO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서 동 법이 국내산업에 대한 이중적인 보호 및 WTO 보조금협정상 의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검토 및 개정을 촉구했다.

2001년 5월경에 개최될 차기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서 상기 보조금통보제도개선과 관련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이 WTO 보조금협

● 국가별 보조금지원 대한 상계조치 현황 ('99년 12월말 현재)

국 가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한국	기타	합계
상계조치	61	6	10	11	6	5	0	9	108
조사개시	10	20	3	0	0	0	0	3	36

정상 보조금통보의무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일본, 브라질 및 멕시코 등의 담당기관과 긴밀히 연대해 보조금 통보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관련 상계조치를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사도 개시하지 않고

있으나, 무역위원회는 향후 국내산업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상계 관세부과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국제적인 이슈 및 동향을 국제회의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 관세법상 상계관세규정이 대부분 덤핑방지관세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제도운영에 문제가 예상되어, 재정경제부와 함께 현행 상계관세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냉방기기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여 사용!**

